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 兼 李 鍾 容
編輯人 張 玉 煥
印刷人 田 根 澤
編輯局長

發 行 所
社 團 韓 國 生 藥 協 會
法 人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 (大山빌딩 3층)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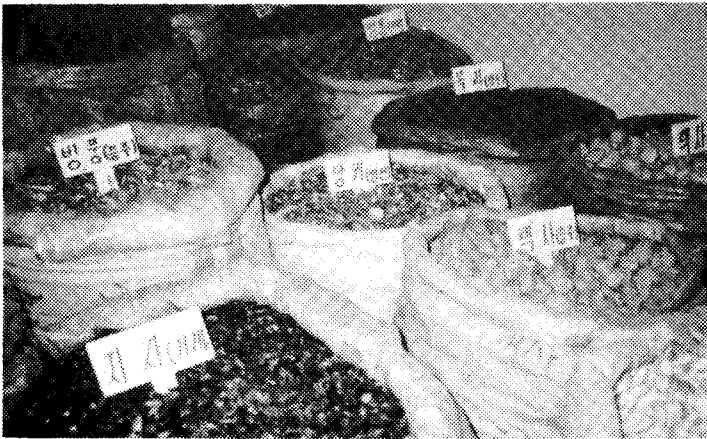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 96 한약재 유통현황과 가격동향 그리고 전망... 3면
- ◎ 농림부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 사업」 전문... 4·5면
- ◎ 몸에 좋은 약술만들기... 6면

단속권 두고 갈등

한 약 재 원산지표시



◇문제의 발단은 농림부의 원산지표시 단속과 관련 한약도 매상들이 민원을 제기한데서 부터이다.

한약재 원산지 표시에 부단속권을 두고 보건·농림부 갈등 심화

농림부

전문인력보유 효과적 단속 가능

의약품, 농림부 단속 대상 아니다

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에 수입산의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농림부에서는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건부의 관할 하에 있는 한약재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단속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건부의 관할 하에 있는 한약재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단속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건부의 관할 하에 있는 한약재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단속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건부의 관할 하에 있는 한약재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단속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건부의 관할 하에 있는 한약재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단속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건부의 관할 하에 있는 한약재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단속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약재값 오름세

수입산에 밀려 국내재배면적 감소 탓

구산한약재 가격이 전 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거실백문동이 지난해 1만1천5백원보다 1천5백원이나 더 올랐다. 1만1천5백원보다 1천5백원이나 더 올랐다. 1만1천5백원보다 1천5백원이나 더 올랐다.

◇시세변동

품 목	가 격	지난달비
거실백문동	14,000	▲2,500
지 모	5,500	▲ 800
대 황 기	30,000	▲2,000
건 강	4,200	▲ 400
길 경	6,700	▲ 200
현 호 색	8,500	▲ 500

967-8133
969-6875

국내 자원식물 정보전산화

임연 중부시험장 식·약용등 5백99종... 산림청 임연연구원 중부시험장 (장성·약광)은 국내 약용식물이나 산채류 등 각종 자원식물 정보를 전산화하여 PC통신망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농림부 78억 7천만원 확정

생약재배자급과 우량종묘생산을 위한 국유농림부지 78억 7천5백만원에 확정되었다.

“요즘 농촌에서는 재배할만한 약초가 없다고 한숨입니다”

생약재는 우리 후손들의 후손 그 후손들에게 까지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을 위해
더 큰 재산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함께사는 내일을 위해
수입엑스제 사용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